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조병서 도의원, 임시회 결의안 통해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해야”

전북도의회 조병서(부안2) 의원은 30일, 임시회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량 배분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했다.

WTO 협정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약 40만 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시도별 매입 물량을 배정하고 있지만,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은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왔다.

이날 조 의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수년째 전국 5위로, 전북에서는 쌀 생산량과 맞지 않은 적은 배정물량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조곡기준 6만3,738톤으로 전국 수매물량 48만6,111톤 중 13.1%이며,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ha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24.8%), 경북(16.0%), 경남(15.0%), 충남(13.8%)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다. 심지어, 2017년 배정량은 전년도 14.1%에서 도리어 1퍼센트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북의 쌀 생산량을 고려하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는 “이에 도내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6년간 100억 원이 넘고, 공공비축미



보이콧 철회했지만

30일 오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현장시찰 올림픽 준비상황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했지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매입량이 적어 지역 내 쌀값 하락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피해는 더 컸다”면서 “특히, 쌀 생산량이 전북보다 적은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지표에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지만,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례하는 물량 배정은 수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병서 의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도내 농민들이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뤄지도록 농림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고은 노벨문학상 수상 적극 지원”

박재만 도의원, 5분발언

군산지역 출신인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박재만 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 가칭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조지에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은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박재만 의원

도선관위-대한주택관리, 온라인투표 업무협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대한주택관리(주) 4층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주)와 공동주택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선관위 정진석 관리과장과 대한주택관리(주) 김윤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정책결정 투표와 동별 대표자 등 공동주택 선거에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를 통한 선거관리를 지원하고 온라인투표 활용 등 공동주택의 선거관리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온라인투표는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과 달리 PC,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장소가 필요 없고 시간에 구애없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앞으로 기관·단체 및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선출, 학생회 임원선거와 더불어 각종 정책결정을 위한 찬·반투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최인정 도의원, 결의안 통해 “230% 부채비율 규제 불합리... 공익성 관점으로 봐달라”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30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 부채비율 230%이내 유지는 중앙관리시 규제이며,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처사로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하지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며, 제3조에서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방향이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반면 경제성 측면에서 경영효율성과 재정안정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정 의원은 “결국, 현재 행안부가 시행하는 방식의 부채비율 규제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실현과는 거리가 멀고, 더욱이 부채비율의 증가를 단순히 지역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짓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지역별 공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역별 공공복리에 대한 주민 수요 다양성 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230% 부채비율 규제가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통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최근 도내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자본규도가 8개도 개발공사 중에서 7번째로 규모가 작지만, 정부의 부채비율 목표 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 조달 능력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4년간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규제에 도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공공성 목적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특히, 수익성 목적이라면 분양단가가 상승해 시민 주거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 2에는 지방공기업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부채비율 230%인 상황에 신규 임대주택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2016년 기준 전북개발공사 부채 중 임대주택관련 비중이 무려 47%에 달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있어 임대보증금이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는 점 역시 지방공기업의 성격상 불합리한 사항이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금융부채와 달리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분양대금으로 회수 가능한 영업부채의 성격을 갖지만,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채가 증가할수록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공기업일지라도 부채가 투자로 연결되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성보다 공익성 관점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대주택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목표 부채비율 산정시 임대보증금을 제외·산출하거나, 현재 230% 부채비율을 300%까지 상향하는 등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금년 내 한중 양자회담... 조만간 한중관계 복원”

강경화 외교부장은 30일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소 계기로 기대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한중 양자회담 추진과 관련해 “시기는 확정적이지 않으나 금년 중에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 양자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에서 편리한 시기에 만나기로 해서 시기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시 주석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했다”고 했다. 다만 올림픽 개최 전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한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중국 19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6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자주 소통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임실군
www.imsil.go.kr



강낭 따라 걷기

속정호 물안개길

때묻지 않은 오솔길. 더불어 느끼는 자연의 신비한 풍경. 산과 구름, 물과 바람이 하나가 되는 곳. 속정호 물안개길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물줄기를 따라 병풍처럼 둘러진 산이 마음을 편안하고 이롭게 합니다. 졸졸졸 반짝이는 시냇물과 징검다리라는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